

제2장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원인에 관한 연구

주 봉 호*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분단은 구조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세계 대립, 냉전대결을 포함하여 역사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개항 이래 식민지 시대부터 내재하며 대립해온 민족독립과 근대국가건설의 노선이 국제냉전과 만나면서 최종적으로 봉인된 것을 의미한다. 1945년 이후 분단분제는 지금까지 한국의 내부와 외양, 국가전략, 상호 관계를 결정지은 핵심요소의 하나였다. 한국분단사 연구에서 많은 주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38°선 획정문제 이상으로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어렵다. 분단의 명시적 출발점이었던 38°선 획정으로 인하여 영토분단이 그리고 남북정권의 수립으로 체제분단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동족상잔의 전쟁이 민족분단을 초래하였고, 이후에는 그것이 휴전선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분단체제를 지속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38°선은 그것이 획정된 시점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삶의 조건을 역사적으로 규정지어 놓은 비극의 분단선이라고 할 수 있다. 미·소는 각각 남북에서 우익과 좌익을 견인해서 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소기의 점령 목적을 달성했다. 국내정치세력은 외세에 의해 주어진 분할점령 구도 하에서 미·소 각각의 우호적 정부 수립 기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이에 영합해 분단구조 창출에 기여했음으로 외인은 내인을 견인했으며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 분단은 한반도에서 구축되었다. 분단구조는 민족 내부의 분열적 요인과 결합되면서 고착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한반도분단의 원인과 과정 논의에 있어서 외부요인인 미·소관계 못지 않게 좌우 그리고 중간파 정치세력의 지도자들 그

* 동의대학교

리고 한국민 전체의 미성숙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의 우리 민족의 삶을 제약하는 본질적 요인이 분단이며,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제가 재통일이라면, 분단의 원인을 사실에 입각,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한반도 분단, 38°선, 신탁통치, 6.25전쟁, 분할통치, 세력 균형, 후기수정주의, 외인, 내인

I . 들어가면서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항복은 우리 민족에게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고 있지만, 그것이 통일된 민족국가의 건설과 사회경제적 변혁까지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해방은 오히려 일제 식민통치시대의 사회경제적 성격이 온존되며 분단국가의 형성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 분단사 연구에 있어서 1945년 광복을 전후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해명은 중요한 과제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외세에 의하여 한반도의 분할이 결정된 데 더하여 한국 독립운동 세력의 합작이 성공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구조의 원형이 이 시기에 거의 결정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붕괴, 냉전해체, 그리고 세계화와 9.11테러 등 세계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한반도 분단

을 보면서, 게다가 북핵문제로 상징되는 한국문제의 국제화와 지역화를 목격하면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독특한 현상에 주목하게 된다. 한국문제의 특수성이 탈냉전과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을 지속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한 비용을 엄청나게 치르게 하고 있다.

주지하듯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현대 한반도의 ‘분단문제’는 가장 중요한 학문적 화두요 실천적 과제이다. 거기에는 국가형성, 민족주의, 국가발전전략, 평화와 통일문제, 민주주의 등 한 사회와 국가, 민족의 현실과 미래의 경로와 가능성을 조건 짓는 제약조건과 가능조건 거의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있다. 요컨대 한반도의 분단문제는 1945년 이후 한국문제(Korean Question)의 핵심요소를 구성하며 그 자체가 국제·남북국내 수준에서 한국문제의 산물이자 가장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실의 어떤 영역과 인문사회과학의 어떤 분과에서건, 분단문제는 한국사회에 핵심적인 이론적·실천적 과제를 던져왔다.¹⁾ 현재의 우리 민족의 삶을 제약하는 본질적 요인이 분단이며,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제가 재통일이라면, 분단의 원인을 사실에 입각,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분단사 연구에서 많은 주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38°선 획정문제 이상으로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어렵다. 분단의 명시적 출발점이었던 38°선 획정으로 인하여 영토분단이 그리고 남북정권의 수립으로 체제분단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동족상잔의 전쟁이 민족분단을 초래하였고, 6.25전쟁 이후에는 그것이

1) 박명림, “한국분단의 특수성과 두 한국: 지역냉전, 적대적 의존, 그리고 토크빌 효과,” 『역사문제연구』, 제13호 (역사문제연구소, 2004), pp.233-234.

휴전선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분단체제를 지속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38°선은 그것이 확정된 시점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삶의 조건을 역사적으로 규정지어 놓은 비극의 분단선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련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 워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점령 문제를 고려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종전단계에서 38°선 분할점령 안으로 확정짓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반도분단에 관련된 외세의 정책적 주안점은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고 유지하면서, 타국의 한반도 지배를 봉쇄하는 것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은 한반도의 단독지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한반도가 상대진영의 세력권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입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분단을 주도한 외세의 정책 및 전략 등을 보면 대개가 자국의 ‘국가이익’ 충족을 최우선의 고려사항으로 생각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강대국의 이익이 한반도에서 첨예하게 충돌하게 되자 결국 강대국은 한반도 분단을 택하여 세력권을 양분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반도분단에 관한 국외학계의 연구동향은 냉전기원에 관한 전통주의적 해석과 수정주의적 해석으로 대립되어 진행되고 왔고, 국내학계에서의 논의는 38°선 획정에 관해서, 분단외인론 그리고 분단내인론으로 나뉘어 전개되어 왔다. 기존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분단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론상의 다양성이 타진되었고, 그를 통해 분단의식의 지평이 보다 확대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엄청난 양의 사료들이 새롭게 발굴되었다. 그리하여 남북 분단의 원인에 대해

서 일부 학자들은 대외적 원인과 대내적 원인을 종합한 복합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은 처음에는 분명히 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민족 외적인 외세의 힘에 의해 초래되었다. 그러나 분단구조는 민족 내부의 분열적 요인과 결합되면서 고착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한반도분단의 원인과 과정 논의에 있어서 외부요인인 마소관계 못지 않게 좌우 그리고 중간과 정치세력간의 관계, 그런 정치세력들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정치적 지혜와 경험 부족, 그리고 한국 민 전체의 미성숙 등이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분단에 기여한 민족내적 원인에 대한 규명작업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방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주요한 시기마다 한민족이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현상을 분단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분단으로 인해 형성되고 파생된 현상들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단체제의 형성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민족모순의 원형이 되었던 것만은 명백하므로 분단의 원인을 우리가 해명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또한 우리는 분단원인을 다각도로 진단하여 그 원인이 되었던 요소들을 오늘의 시점에서 해소시킬 방법을 찾음으로써 발전 지향적 분단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점인 민족분단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보다 현실적·객관적으로 분단 원인을 규명하고자 복합론적 인식과 가변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좀더 정밀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 분단의 유형

먼저 분단의 의미에 관해서 정리해 보자. 헨더슨 등은 세계의 분단국문제를 다루는 저서에서 분단국가(divided nation)와 분립국가(partitioned country)를 별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그들에 따르면, 분단국가들(divided nations)은 뚜렷한 인종적 동질성, 공통된 역사적 전통, 성공적인 정치적 통일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상태 직후에 두 개의 정치 단위로 나누어진 국가들이다. 분단은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인위적인 것이며, 분단을 강요한 외부란 통상 전쟁 종료 시의 강대국이다. 분립국가들(partitioned countries)은 동일한 정치 단위에서 거주하고 있던 집단들 사이에서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갈등 때문에 야기된 내부적 원인들로부터 결과 된 분단국들이다. 이런 분단들은 대개 식민주의 제국의 붕괴와 연관된다.²⁾

따라서 분단이란 하나의 영토 위에서 장기간 단일의 통치체에 의해 통치되어 온 정치단위가 내·외적 요인들의 작용으로 인해 토착민들이 복수의 주권적 정치단위로 분열되어 영토를 분할 지배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정의는 분단되기 이전의 통치체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토착민의 주권적 통치체가 아닐 수도 있으며(식민지 통치기구), 분단의 원인이 내인, 외인, 내외인 복합 중 어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분단을 이렇게 정의했을 경우, 분단 현상의 핵심사항은 토착민에 의한 복

2) Gregory Henderson, Richard N. Lebow and John G. Stoessinger, *Divided Nations in a Divided World*(New York: David McKay Company, Inc., 1974), p.434.

수의 주권적 정치단위 구성과 그들에 의한 영토의 분할 지배이다.

이러한 분단의 개념정의를 한반도의 분단에 적용하면, 한반도의 분단은 한반도라는 영토 위에서 장기간 단일한 통치체에 의해 통치되던 정치단위가 두 개의 주권적 정치단위로 분열되고 그들이 한반도를 분할 지배하게 된 것을 뜻한다.³⁾

이제 분단의 원인에 있어서 ‘원인’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원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분단 원인을 정리해보면,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란 한반도라는 영토 위에서 장기간 단일한 통치체에 의해 통치되던 정치단위가 두 개의 주권적 정치단위로 분열되고 그들이 한반도를 분할 지배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는데 필연적, 우선적 작용을 했던 요인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된 국가들을 국제적 요인에 의하여 분단된 국제형, 민족 내적 요인에 의하여 분단된 내쟁형 그리고 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복합형으로 단순화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⁴⁾ 먼저 독일과 베트남의 경우는 국제형이며 중국의 경우는 내쟁형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복합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국제형적 성격과 내쟁형적 성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분단형으로서 매우 특이한 성격을 형성하고 있다. 분단 초기의 상황만 본다면 한국은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이다. 즉 한반도는 국제적 요인(미·소의 분할점령)이 압도적인 상태에서 분단이 시작되었다.

3) 양동안, “한반도 분단의 정확한 원인 규명,”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pp.141-142.

4) 김학준, “한반도 통일문제의 재조명: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요인,” 『국제정치논총』, 27권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87), p.5.

다음으로 분단체제를 유형화시켜보면 크게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나눌 수 있다. 안정형은 상호체제의 인정 속에서 공존을 추구하는 유형이고 불안정형은 상대방의 정통성 부인 속에서 전쟁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하겠다. 한반도 분단은 전형적인 불안정형 성격으로서 체제가 안정되지 못하고 대결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불안정형 분단체제는 분단구조의 확산, 분단체제의 구조화라는 의미로써 대내적 분열의 결과임과 동시에 대외적 냉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1. 전통주의와 수정주의

우리는 국내외 연구자들간에 나타나는 문제의식의 상이성을 발견하게 된다. 즉, 국내연구자들이 한반도분단 그 자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38°선의 설정 및 미·소군정체제의 성격규명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던 반면, 국외연구자들은 한반도분단과정, 특히 6.25 전쟁을 통하여 냉전구조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연구경향을 보여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분단에 관한 국내외 학계의 초기연구동향은 국외에서는 냉전의 전통주의적 해석의 주류를 이루고, 국내에서는 국제적 분단책임론, 즉 분단외인론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에 대항하여 1970년대 중반에 등장한 새로운 시각들은 냉전의 수정주의적 해석과 분단내인론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⁵⁾

한국분단에 관한 국외, 주로 미국에서의 연구시각은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대립으로 나누어져 왔다. 전통주의란 제2차 세계대전

5) 안병도, “한국현대사의 연구동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1845-1980년대의 정치·외교분석』 (대왕사, 1993), p.14.

이후의 마소간 대립, 갈등현상, 이른바 냉전의 책임을 소련의 호전적이며 공격적인 팽창정책에서 찾는 시각이며, 수정주의란 그 반대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이 냉전구조를 낳았다는 주장이다.⁶⁾

전통주의학과(the Orthodox 혹은 Traditional School)와 수정주의학과(the Revisionist 혹은 New Left School)간의 논쟁은 미국의 외교사학과와 국제정치학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전통주의는 이미 학계의 정설로 확립되어 주류를 형성한 입장을 말하는 것이며, 수정주의는 이러한 정설을 다른 각도에서 조망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입장을 말하는데,⁷⁾ 전통주의자들은 공격적 행동(action)을 보인 소련 때문에 냉전이 출현했다고 주장했다. 소련은 팽창적 욕구를 가진 비타협적 침략자요 제국인데 비해 미국은 대화를 중시하여 냉전출현 전까지 타협을 시도했던 ‘선한 문명의 전파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냉전은 소련의 공세적 욕망 때문에 생긴 것이며 바다 건너 유럽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고립주의적 기저를 가진 미국은 유럽인의 요청에 따라 마지못해 방어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전통주의적 입장에서 한반도분단을 해석하는 사조는 적어도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학계에서 큰 도전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자유법에 의거하여 미국정부의 비밀문서가 공개됨에 따라 이전까지의 냉전에 대한 해석과는 전혀 다른 사조, 즉 수정주의적

6) William W. Stueck Jr., *The Road to Confrontation: American Foreign Policy Toward China and Korea, 1947-1950*(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1).

7) William Appleman Williams, "Confession of an Intransigent Revisionist," *Social Revolution*, Vol. XVII (1973), p.90.

입장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주된 관심은 전후 마-소세계정책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 있었으며, 한반도 분단문제는 그 과정에 부수적인 관심사로 다루어지거나 혹은 미리 설정한 가설의 입증사례로 다루어지곤 했었다.

수정주의적 입장의 출발점은 미국의 전후정책이 오히려 제국주의적이며 팽창주의적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이 자본주의체제의 유지와 확산이라는 세계정책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전후의 세계질서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국가들의 통합에 전념하였다고 전제하였다.⁸⁾ 오히려 미국이 공격적 행동을 보였으며 소련이 방어적이며 수세적으로 대응(reaction)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최강대국이며 세력권 확장을 노리는 제국임에 비하여 당시 소련은 전쟁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핵무기의 위협에 둘러 있던 '2류강대국'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무기로 소련에 대하여 비타협적인 일방적 자세를 견지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며 반면에 소련은 결코 수동적이지는 않았지만 방어적이었다고 해석했다. 미국의 세계지배 욕구가 소련의 반발을 자극하였고 이것이 경화된 소련의 태도를 유발함으로써 냉전이 발단되었다는 것이다.⁹⁾ 이같은 견해는 방어를 표방한 미국의 정책이 오히려 공격적인 것이었으므로 전후의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갈등의 책임도 미국에게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수정주의학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종전을 전후한 미국의외교정책의

8) Franz Schurmann, *The Logic of World Power: An Inquiry into the Origins, Currents and Contradictions of World Politics*(New York: Pantheon Books, 1974), pp.185-186.

9) Robert James Maddox, *The New Left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게 되었다. 전통주의 학자들이 냉전의 책임을 6.25전쟁이라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규명하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정주의학자들도 6.25전쟁의 도발책임을 미국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그들의 논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¹⁰⁾ 그러므로 냉전의 기원에 관한 대립적 인식에서 출발한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한반도 분단논쟁은 분단기원에 관한 이데올로기적 해석의 경향을 보이게 되고, 따라서 분단구조의 객관적 위상의 정립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마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해도하기보다는 객관적 입장으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후기 수정주의가 문제를 객관적으로 논구할 수 있는 준거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¹⁾

후기수정주의자들은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책임 전가식 대립구조 속에서 마소 양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적인 견해를 제시하여 대립을 지양하려고 했다.¹²⁾ 후기수정주의(post-revisionism)는 ‘소련=제국론’(전통주의), ‘미국=제국론’(수정주의)의 양분법적 논리구조에 대항하여 ‘미국-소련=제국론’을 제시한다. 소련이 자기 팽창을 위한 욕구를 가진 제국이라면 당시 최강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했던 미국도 역시 세력을 확대하려는 국가적 이익을 추구한 제국이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후기수정주의의 입장은 국제정치 이론의 현실주의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기수정주의

10) 안병도, 앞의 글, pp.17-18.

11) 이완범, “서장: 38선 획정에 대한 진실 탐구의 의미,” 『삼팔선 획정의 진실: 1944-1945』 (서울: 지식산업사, 2001), pp.32-35.7

12) John Lewis Gaddis, “The Emerging Post-Revisionist Synthesis o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Diplomatic History*, Vol.7, No.3(Summer 1983).

자들은 소련의 공격적 행동과 미국의 방어적 대응에 의하여 냉전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상승하여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결론을 내린다. 냉전 몰락 이후 후기수정주의는 전통주의적 입장을 보다 넓게 수용했는데, 그래서 수정주의자들은 후기수정주의자들을 신전통주의(neo traditionalism)라고 부른다. 실제로 후기수정자들은 수정주의자들에 비해 보수적이며 중도우파(right of center)의 이데올로기를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기존의 전통주의·수정주의가 자료로 실증하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을 가진 데 비해 후기수정주의는 자료를 섭렵하고 이를 토대로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orthodoxy plus archives”라고 별칭된다.¹³⁾

따라서 이 글에서 선행 업적이 가지는 가치지향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기 위해 후기수정주의적 양비론과 현실주의적 시각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외인론과 내인론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우리 민족 내부의 요인이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를 내인론으로, 우리 민족 외부의 요인 즉 국제적 요인이 분단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를 외인론으로, 내인과 외인이 복합작용하여 분단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논리를 복합론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 분단의 원인은 그것이 유기적으로 얹혀 있

13) 한편 후기수정주의자들 중 수정주의에 보다 더 경도된 인사들도 있는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후기수정주의를 ‘revisionism plus archives’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크게 민족 내부적 원인(내인)과 외세의 의한 원인(외인)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¹⁴⁾ 외세의 영향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상정하는 외인론자들은 대체로 한반도 분단이 미·소간의 권력이테올로기 대립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정치 이론가들은 ‘외세의 압도적 규정성’이라는 술어로 외인론적 입장을 개념화했다. 이에 반하여 외세보다는 ‘민족’의 입장에 서있으면서 비교적 근본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들은 미국이라는 외세가 미군정 시기의 한국인들을 지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 학자들은 국내 정치세력의 좌우대립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내인론을 정식화했다.

분단외인론적 시각은 한반도 분단구조화의 과정에서 미·소의 갈등관계를 비판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즉 한반도 분단의 외인론은 분단을 국제권력정치의 결과로 인식하는 이론이다. 외인론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단은 민족의지와는 상관없이 연합국의 타율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외인론에 따르면 한반도분단은 연합국 승리의 산물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전시하 연합국 회담의 결과 전후처리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¹⁵⁾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과정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전

14) 이완범, “한반도 분단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미국과 국내정치세력간의 역7학관계, 1945-1948,” 유영익 편,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pp.103-104.

15) 정경환, “한반도 분단의 원인과 성격,”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부산: 신지서원, 2002), pp.19-20.

략적인 가치를 고려한 미·소가 보상의 차원에서 분할점령한 것이 한반도 분단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분단외인론은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문제의식과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시각을 달리하는 새로운 해석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분단책임의 소재를 외세에만 전가할 경우 민족주체적 역사의식을 상실하게 된다는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일컫어 내인론으로 부르는데, 그 논리의 출발점은 외인론의 비판에서 시작되고 있다. 즉, 외인론은 첫째, 분단에 대한 숙명적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 둘째, 한반도분단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강대국의 논리에 편승하기 쉽다. 셋째, 분단을 억제하려는 대내적 통합운동의 의의가 과소평가된다. 넷째, 분단극복의 자주적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는 약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내인론의 기본논지는 한반도분단은 미·소의 분할점령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한민족 자신에게 있다¹⁶⁾는 것이다. 내인을 외인보다 무거운 비중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역사인식의 주체적 자세’를 이유로 내인의 비중을 무겁게 산정한다. 그들은 한반도 분단의 내적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열거했다.¹⁷⁾ 1) 식민지시대의 독립운동과정에서 나타난 사상적 대립 및 그 연장선에서 나타난 민족 내부의 사상적 대립, 2) 건국준비위원회, 좌우합작운동, 남북협상 등 일련의 좌우합작 명분을 내세운 운동의 실패, 3) 반탁세력의 투쟁으로 인한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4) 외세의 분할점령에 편승하여 분단국가를 만들어서라도 정권을 잡으려 한 일부 정치세력의 획책과 술

16) 강만길, “해방7전후사인식의 방향,” 『해방전후사의 인식 2』(서울: 한길사, 1985), p.9.

17) 박태균, 『한국전쟁』(서울: 책과함께, 2005), p.99.

수, 5) 국제정세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실주의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방해한 감상적 민족주의 및 파벌주의의 정치문화, 6)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저해한 왕조시대 이래의 한민족 사회 내부의 사회적 모순과 계급갈등 등이다.

이상과 같은 내적 원인들이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하는데 있어서 외인과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외세에게만 돌리지 말고 우리 민족도 반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⁸⁾

한반도분단의 문제를 주로 국제적 세력갈등의 시각에서 이해해 보려는 연구풍토에서 내인론의 등장은 분단문제에 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좌우익의 양극화된 대결상황을 완충적으로 조정해 주고 자주적 국가수립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던 중간과 논리에 대한 재평가는 내인론의 출현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성과였다.¹⁹⁾ 그러나 이 논리의 주장자들은 동시에 몇 가지 한계성도 보여 주고 있다. 첫째, 분단의 대내적 책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분단현상에 대한 외세의 역할과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국내정치세력의 분열을 독립변수로 보고 마소의 정책대립을 종속변수로 파악한다는 점, 셋째, 주체적 역사의식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빠져 있다는 점, 넷째, 내인론은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칫하면 역사비하와 비주체적 역사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1980년대 중반부터 최근 미국학계의 연구동향에 영향을 받은 일단의 소장연구자들로부터 내인론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18) 양동안, 앞의 글, pp.145-146.

19) 진덕규, “해방직후 좌우세력의 성격,”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론』(서울: 법문사, 1986), p.100.

의 내인론이 제기되었다. 수정주의학파의 연구경향으로 지적되었던 국내정치구조에 대한 관심은 미군정과 우익세력의 결탁, 좌익세력에 대한 미군정의 구조적 탄압, 지방인민위원회의 구조와 성격, 그리고 지방에서의 민중동요²⁰⁾ 등에 대한 연구성과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에 고무된 일단의 연구자들은 한반도의 분단이 한반도에 내재하였던 계급모순적 갈등이 미군정의 정책에 의해 왜곡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펴게 되었다.²¹⁾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냉전의 기원에 관한 수정주의자들의 논리가 짙게 깔려 있다. 다만, 수정주의자들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일차적 관심을 두는 데 반하여, 이들을 국내 우익세력의 계급적 모순에 일차적 관심을 두고 있는 점만이 다르다 하겠다.²²⁾ 따라서 이러한 입장의 내인론을 일컬어 수정주의적 내인론으로 부를 수 있겠다. 수정주의적 내인론은 남북한에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된 것을 계급적 모순관계가 민족적 모순관계로 전환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3. 복합론

외인론과 내인론 중 어느 것이 한국분단을 조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이론일까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두 원인이 중층적으로 작용했다는 복합론 즉 한반도 분단이 중첩적이며 다층적

20) 정해구, 『10월인민항쟁연구』(서울: 열음사, 1988).

21) 김광식, “미군정과 분단국가의 형성,” 최장집 편, 『한국현대사 I』(서울: 열음사, 1985), pp.181-182.7

22)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eperate Regimes*(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거의 모든 논자들이 동감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의 원인 규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주장되고 있는 설은 복합론이다. 복합론은 첫째, 내인과 외인의 비중을 거의 동등하게 보는 복합론, 둘째, 외인의 우세를 인정하는 복합론, 셋째, 내인의 우세를 인정하는 복합론 등 세 개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 원인과 관련하여 외인우세 복합론을 취하는 학자들은 내인의 비중을 약하게 평가하면서도 그것들이 분단의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첫째, 한반도의 분단은 1차적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한 국제형 분단이나 38°선 획정에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²³⁾ 둘째, 미국이 소련의 한반도 전체 점령을 봉쇄하고 미국의 영향권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한반도를 분단시켰다는 것이다.²⁴⁾ 셋째, 미국이 38°선을 경계로 미·소가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것을 계획 주도하여 한반도 분단의 단초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²⁵⁾ 물론 일부의 학자들은 소련의 책임을 묻고 있다.²⁶⁾

그리고 미·소공동책임론을 취하는 입장은, 38°선 획정은 비록 미국 ‘전략정책단’이 기안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미국과 소련의 최고 수뇌부가 정책적으로 기획하고 명령한 것이었으므로 한반도 분단에 대한 미·소의 책임은 똑 같다는 것이다.²⁷⁾

23)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과정·휴전영향』 (서울: 박영사, 1989), p.6.

24)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p.56-58.7

25) 이완범, 『한반도 분할의 역사: 임진왜란에서 6.25전쟁까지』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p.536-537.7

26) 양동안, 앞의 글, pp.164-167.7

27) 신용하, “열강의 한국 남북분단 및 신탁통치 정책과 백범 김구의 노

다음으로 복합적 내인론의 관점에서 한반도 분단문제를 조명하는 일단의 연구자들은 역사인식 및 접근방법에서 몇 가지 공통된 태도를 견지해 왔다. 첫째, 이들은 민족사의 주체적 정립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²⁸⁾ 둘째, 이들은 민족해방운동과정에서의 방법론적 대립과 분열이 국가수립과정에서 극좌와 극우의 적대관계로 이어짐으로서 분단이 초래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²⁹⁾ 셋째, 이들은 좌우익의 대립을 극복하려는 중간파와 합작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중간파의 논리에서 ‘민족해방’의 규범을 찾으려는 경향을 보인다.³⁰⁾

무릇 문제의 원인이 단일적(단선적)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문제 발생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경우가 더 많다. 물론 여러 요인 중에 우세한 한 가지 요인은 있을 수 있다. 복합론적인 인식은 내인과 외인 어느 한 원인을 배타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보자는 시각이다. 외인과 내인은 그것이 유기적으로 얹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나눈 것이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외세에 의해 모든 것이 강요되어 결정된 예는 별로 없었다. 식민지화도 국내 지배세력의 야합이 있어야 가능했던 일이다. 다른 한편 특히 근대

선(1943~45),”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광복직후의 건국운동과 백범 김구』(백범기념관 개관 2주년기념 학술회의 논문집) (2004), pp.28-29.

28) 서창호, “남북 분단의 대내적 원인: 찬·반탁 투쟁과 좌우합작운동의 실패를 중심으로,” 『민족공동체와 국가발전』(한국정치학회, 1989).

29) 신복룡, 『한국 분단사 연구』(서울: 한울, 2001); 정영훈, “한반도 분단의 민족내적 원인,” 『정신문화연구』, 21권 2호(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30) 이호재7, “한국분단연구의 특징과 문제점: 분단원인의 제가설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27집 1 (한국국제정치학회, 1987).

이후의 우리 역사가 내부적인 힘만 가지고 발전된 것은 아니다. 역사적 결과를 산출한 원인은 너무 복잡적이어서 복합론으로만 설명가능한 시기와 국면이 있다. 따라서 내인론과 외인론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설명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내인이 우세한 복합형’과 ‘외인이 우세한 복합형’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정 국면에는 내인과 외인 중 어느 것이 강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³¹⁾

위와 같은 복합론적이며 유기적인 인식은 외인론과 내인론의 의견 대립에 맞서 중간적 입장에서 이를 지양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외세와 한국 민족주의 양자 모두 분단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과 통한다. 또한 냉전의 기원 문제에 있어 미·소 모두에게 책임을 지우는 후기수정주의적 양비론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분단의 원인을 규명하려 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각을 견지한다면 보다 더 정확히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복합론적 인식과 가변적인 시각이다. 복합론적인 인식은 내인과 외인 어느 한 원인을 배타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보자는 시각이다. 그리고 가변적인 시각은 결정적 요인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유동적인 인식이다. 역사는 국면에 따라 외인론적 시각에서 조망해야 할 때도 있고 내인론적 시각에 의해 연구해야 할 시기도 있는 가변적이며 유기적인 것이다. 한 국가를 유형화하려고 할 때는 어떤 고정적 형태로 정형화시킬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시각을 가지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31) 이완범, “한반도 분단의 성격: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 분단,” 한국전쟁학회 편, 『한국현대사의 재조명』(서울: 명인문화사, 2007).pp.25-27.

Ⅲ. 대외적 요인

1. 미·소의 한반도 전후처리와 38°선 획정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세력은 카이로(1943.11), 테헤란(1943.11), 알타(1945.2), 포츠담(1945.7) 회담을 하면서 전후 세계지도 재작성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독일과 일본에 대항한 전쟁을 어떻게 끝내는가도 중요하였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데 따른 보상(compensation)의 차원에서 전후 패전국 처리와 패전국이 소유하였던 영토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갈등을 시작하였다.³²⁾ 한국문제에 관하여 미국 정부는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부터 예상되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를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소련에 대하여는 아시아 전쟁 참전의 대가로 사할린 쿠릴열도 등의 영토적 보상이 이루어졌다. 한반도의 38°선 이북 지역도 전쟁참전 대가의 보상차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소련의 한국문제 개입은 2차 대전의 종결을 위해 미국이 대일전의 참전을 권유함에 따라 비롯된 것이다.³³⁾ 물론 미국이 소련을 대일전에 참전시킨 것은 종전을 앞당겨 자국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³⁴⁾ 1945년 8월 9일부

32) 김계동, 앞의 책.

33) 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연구 2: 해방과 분단』(서울: 역사비평사, 1995), p.173.

34) *FRUS*, 1943, p.625; 김기조, 『38선 분할의 역사: 미·소·일간의 전략대결과 전시 외교 비사(1941-1945)』(서울: 동산출판사, 1994), pp.45-46.

터 대일전에 참전한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상응한 군사력을 한반도에 파견하여 소련의 한반도 전체 점령을 봉쇄할 수 없었던 미국에게 있어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한반도의 분할 점령이었다. 알타회담 등 전시 회담을 거치는 동안 미국은 소련과 신탁통치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나,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은 38°선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소련의 세력분할을 제의하였다. 미국은 급한대로 일단 한반도의 분할, 즉 ‘분할통치’(divide and rule)를 택하게 되었다. 추후 한국전 당시 유엔군이 반격에 성공하여 무력통일을 시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나 미국의 분할통치 정책은 고수되었다. 분할통치정책의 기본 논리에는 한반도 상대진영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었다.³⁵⁾

반면 소련은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기회를 포착하였으나, 당시 소련의 국가이익은 한반도보다는 일본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스탈린은 미국의 38°선을 분할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한반도가 친미화하여 미국 세력권에 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독점적 지배를 막기 위하여 소련도 한반도에서의 방어적 거점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은 서로가 상대방이 한반도를 독점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분할통치’라는 개념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마소는 이면적으로는 각각 독점을 추구했지만 가용한 자원의

35) 김계동, “한반도 분단전쟁에 대한 주변국의 정책: 세력균형이론을 분석틀로,” 『한국정치학회보』, 35집 1호(한국정치학회, 2001), p.352.

한계와 한반도의 반주변부적인(semi-periphery) 전략적 위치를 고려할 때 적당히 반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했을 것이다. 특히 소련이 참전하기만 하면 한반도 북부로 진공할 것은 예견된 상황이었으므로, 미국의 당국자들은 결국 분할 점령이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38°선은 상당한 기간의 심사숙고와 세력권 분할론이 소련의 대일전 참전으로 순간적인 결실을 맺은 것이다.

38°선 획정의 기안 과정은 1945년 8월 중순부터가 아니라 1944년 일본의 항복이 가시화되어 미국이 한국 점령안을 검토하게 되는 시점에서부터 고찰해야 한다. 이때부터 한국 점령을 내부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던 미국은 여러 복잡한 정치적 고려 과정을 거쳐 미·소 양분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카이로에서 미·영·중 3거두가 발표한 ‘적절한 과정’(in due course)이라는 애매한 구절을 보다 구체화하여 신탁통치와 결부시키는 동시에 가시화된 일본항복에 대비하기 위하여 1944년 초에 한국문제를 논의했다. 이 결과 1944년 3월 22일 최초의 점령안인 다국적이면서도 단일단위인 점령안을 구상했다. 이 안은 신탁통치의 실시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로써 결국 점령→신탁통치→독립의 장기적인 3단계 구상이 확립되었다. 국무부 정책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의 결과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역이 점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독립한 역사적 예는 없었으므로 국무부가 연합국의 점령을 신탁통치에 선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간주했던 것은 당연하다.³⁶⁾

36) 이완범, “미국의 한국 점령안 조기 준비: 분할점령의 기원, 1944년 -1945년 7월 10일,” 『국제정치논총』, 제36집 1호(한국국제정치학회, 1996), p.245.

미국이 책임 회피용으로 고안한 ‘군사적 편의설’은 그 목적대로 책임을 가볍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의미를 가진 세력 분할 선을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결정했다는 무책임성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³⁷⁾

38°선을 획정한 당사자는 현역 군인이었으나 이들에게는 상부로 부터 가능한한 북쪽까지 확보하라는 정치적 고려사항이 전달되었다. 따라서 군인이 획정했기 때문에 단순히 군사적 편의에 따랐다고 속단할 수 없다. 엘리트 군사전략가인 린컨 준장(George Lincoln)과 본스틸(Col. Charles Bensteel), 러스크(Col. Dean Rusk) 두 대령은 정치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군인이었다. 또한 군사와 정치를 분리하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 고도의 정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분할선 결정을 순수히 군사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전략정책단의 군사전략가들은 군사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고려하는데 있어서 미국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의 편의주의적이고 책임회피적인 사후변명을 통해 오히려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타국을 점령한 국가는 그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모색하는 정책 중에 최우선은 은밀하게 내부적 분열을 조장

37) 군사적 편의설을 지지하는 논자들은 미국이 한반도에 대하여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으므로 38선을 짧은 시간 내에 편의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군사적 편의설의 일부를 이루는 이러한 견해를 ‘준비부족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준비부족론을 주장하는 전통주의자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사전지식도 없이 군사적 편의만을 따라 진주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관성 없이 헤맸다는 ‘fumbling theory’를 주장한다. 이에 비하여 수정주의자들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bulwark)을 쌓는다는 정책목표를 일관되게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하는 것이다. ‘국내정치 개입’과 ‘분할통치’의 수단을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점령국들은 한반도를 무한정 점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착세력을 이념적·정치적으로 동맹세력화하여 냉전의 전초기지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반도를 점령한 이후 미국인들은 한국이 동북아에 있어서 공산주의에 대한 봉쇄정책의 상징으로 존속하도록 기대하였다.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된다면 일본의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미국의 아시아 본토에서의 거점을 잃게 되어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이 붕괴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력권이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부가 수립되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한반도 토착정치세력을 무력화하고 미군사정부를 수립하였다. 한편 소련은 점령 초기 국내 정치세력을 활용하여 통치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지리적 또는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미국보다 소련에 근접하여 있었으므로 친소련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반도 분할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그 전쟁 당사자 간의 사활이 걸린 대격전의 부산물이었다. 그 대전의 종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된 것이다. 그런데, 소련이 북방에서 대일 참전을 하지 않았다면, 또는 소련이 대일 참전을 하기 이전에 일본이 항복하였더라면, 한반도는 미·소에 의한 분할을 모면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예를 들면, 7월 포츠담에서의 연합국 선언은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만약 일본정부가 즉시 이 선언을 받아들였다면, 히로시마에 어떠한 원자폭탄 투하도 없었을 것이고 소련이 전쟁에 가담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항복은 치명적인 폭탄이 투하되고 소련군이 만주에서 이미 일본군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천황이 연합국 선언의 수용을 그

시점까지 지연한 것이 한국인들의 운명에 또 하나의 가장 고통스런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8월 15일, 트루먼 대통령은 북위 38°선 상에서 한국을 두 개의 점령지역으로 분할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다음날 스탈린이 이에 즉각적으로 동의하였다. 동시에 일본 본토는 미군에 의해서 단독 점령되도록 결정되었다. 따라서 일본 본토의 통합은 한국이 분단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승전국들에게 일본 본토를 대신하여 분할된 것이다.³⁸⁾

2. 미국의 탁치안 파기와 한국문제의 유엔이관

한국분할의 정치적 요인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소 전략상의 고려였다. 물론 미국이 처음부터 분단을 항구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획책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신탁통치에 이르기까지의 잠정적인 분할선으로 생각한 것은 확실하다. 그런 분할점령 자체가 대소 전략상의 고려에서 태어난 이상, 소련과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할점령이 고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바로 여기에 신탁통치의 구상 및 분할점령의 결정을 정치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신탁통치에 대한 미·소의 구체적 합의가 없었던 시점에 있어서는 분할선도 잠정적 성격밖에 갖지 않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한국 신탁통치안 자체도 소련세력의 저지를 위한 유효한 조치로써 고려되고 있었던 점이다. 따라서 전후의 미·소

38) 와다 하루키, “남북분단의 기원과 상호공존을 위한 길,” 『지구촌시대의 한국: 회고 50년, 전망 50년』(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98), pp.322.

냉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38°선이 마소 냉전의 분할선으로서 고정화될 가능성은 객관적으로는, 당초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다.³⁹⁾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채택된 신탁통치는 미국이 주변 강대국의 참여와 협력이라는 이름아래 세력균형의 유지와 조정 그리고 이를 통한 평화 구축이라는 전통적인 아시아 정책의 틀 속에서 한국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⁴⁰⁾ 미국은 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한국문제 처리를 위해 신탁통치를 구상하고 연합국들과 차례 이 문제를 협의하면서 최종적으로 모스크바에서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의 신탁통치안은 한반도 전후 처리과정에 있어서 중국 및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미국의 영향력의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반도와의 역사적·지리적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 소련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던 미국의 영향력을 최대한도로 부상시키기 위한 안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신탁통치안은 미국외교정책에 있어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고, 그러한 이유로 중국이나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극소화시키려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강구되었을 때 신탁통치안은 더 이상 추구되지도 않고 추구할 필요도 없는 상황

39) 최상용, “분단, 점령 그리고 평화,” 『남북분단의 극복과 평화』(서울: 고려대 평화연구소, 1990), pp.23-24.

40) 미국은 정치외교적인 면에서는 독립된 한반도를 일정기간 동안 몇 나라의 공동 통제 하에 두는 신탁통치안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신탁통치안은 1942년 2월 미국무성 극동국에 근무하던 랭던(William R. Langdon)이 처음으로 고안하였다. 랭던의 제안은 토론과정을 거쳐 국무성에 의하여 수정되어 수용되었다. 신탁통치안은 40년간의 일본 지배 후에 해방을 맞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통치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 예견되므로 국가통치기술을 교육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의되었다.

이 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미국이 제의한 신탁통치안을 세력균형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미국은 전후 한반도 처리 및 통치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변강대국들과 한반도에서의 공동 세력권 형성을 모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탁통치는 관련 당사국들의 협조와 이데올로기적인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협조체제(Concert System) 아래에서 가능한 제도였기에 처음부터 실패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었다. 당시 마소간의 대립을 보이는 시점에서 이같은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탁치안은 한국의 역사와 한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방안으로 36년간 외세의 통치를 경험한 한국민들의 감정적인 반발을 가져왔다. 결국 신탁통치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됨과 함께 양국의 한반도정책에 대립을 보이며 마소간의 관계가 완전히 대결관계로 발전하면서 결렬된다.⁴¹⁾ 결국 신탁통치를 위한 통일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양측 추천인사들의 자격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1946년, 47년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⁴²⁾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시작되어 세계질서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양국은 새로운 시도보다는 기존의 ‘분할통치’에 의한 세력균형이 어느 편의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측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의 신탁통치구상과 분할점령을 일관하는 대소 전략상의 고려는, 그 논리적 귀결로서 점령정책 수행의 과정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혁명의 저지에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연결의 정도는 마소의 협조관계의 붕괴와 한국내 혁명적 민족운동의 고양에

41) 이미경, “전후 소련의 한반도 정책과 분단체제 형성,”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3권 1호(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1). pp.231-232.

42) 심지연, 『미소공동위원회 연구』(서울: 청계계연구소, 1989).

부응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그 후의 남북한의 점령정책의 진행과 미·소 냉전의 강화로 인하여 38°선이 반소 방벽선으로 고정화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신탁통치안도 미국의 입장에서 대소 전략상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

미·소 양측 모두 현 상태(분할점령)의 지속을 원했으므로 모두 분단지향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서로의 분단 의도를 정치적으로 파악하면서 각각의 일방적 조치를 상호 상승시켰다. 즉 거울을 통해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듯하면서 서로의 전략을 상호 증폭시켜 동일한 수준으로 만드는 거울효과(mirror image effect)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소련과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후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국제적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였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소련과의 세력권 다툼에 국제평화 및 안보기구인 유엔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루도록 함으로써 미국은 한반도 처리문제에 미국의 입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은 1947년 10월 17일 정식으로 한국의 독립문제를 공위에서 유엔으로 이관시키는 일방적 조치를 단행하여 미소합의안인 탁치안을 스스로 파기했다. 모스크바결정 이전부터 ‘유엔을 이용한 탁치안’을 대안으로 가지고 있었던 미국은 모스크바결정의 실현(미소공위에 의한 통일 임시수립)으로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부수립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인식하여 ‘미국의 거수기’ 유엔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 유엔은 미국 외교의 뒷마당이었다. 그러하여 미국은 세계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에 한반도문제를 상정하였다. 유엔에 정식으로 제출된 미국안은

‘유엔감시 하의 총선거안’이었다.

이에 대한 소련안은 ‘양군동시철군안’이었다. 미국안은 ‘선정부수립 후 철군안’인데 비하여 소련안은 ‘선철군 후정부수립안’이었던 것이다. 유엔정치위원회에서 10월말-11월초에 미·소안을 각각 별도로 표결하여 미국안은 가결되고 소련안은 부결됐다. 11월 14일 총회에서 미국측 수정안이 43대9(기권6)로 가결·채택되었다. 소련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한 데 대하여 격렬히 반대하였고, 유엔 감시하에 한반도 전체에 대한 총선거를 실시한 후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유엔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12월 19일 예상했던 대로 소련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의 북한 지역 입국을 거부하였다.

IV. 대내적 요인

1. 신탁통치를 둘러싼 좌우대립

8.15해방은 민족운동의 직접 목표였던 일제 식민통치가 끝났다고 하는 뜻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으며, 근대 민족주의 운동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였던 ‘반(半)봉건체제’의 타파도 마땅히 가져와야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8.15 해방은 민족의 독립과 함께 일제 식민통치의 잔재 청산, 반봉건적 토지소유제도 등의 개혁·폐지 등을 중심목표로 하는 ‘반(反)식민·반(反)봉건 민주혁명’의

실현·완성이라는 책무를 우리 민족에게 안겨 주었다. 또 이와 함께 민족해방이 마·소의 분할점령이라고 하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제약조건을 동반했기 때문에 이 분할점령을 극복하는 문제, 곧 ‘자주적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한국 민족운동의 핵심과제로 나타나게 되었다.⁴³⁾

모스크바 3상회담의 내용과 합의사항을 보면, 찬탁과 반탁진영으로 나누어서 격렬히 대결하던 그 시대의 한국정치인들이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보와 이해 없이 맹목적으로 그리고 극히 감정적으로 대처하였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그 당시 한국인들은 대개 모스크바 3상회담 합의내용 중 일부인 신탁통치부분에만 관심을 집중시켜 반대를 했지, 더 중요한 부분인 임시 통일정부수립부분에 관한 것에는 크게 주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모스크바 합의가 제안하고 있던 임시 한국통일정부는 주권은 5년간 4개 연합국에 있지만, 그 성격면에서 첫째, 국내적으로 좌우연립정부, 둘째, 국제적으로는 마·소 양국의 이해를 절충한 중립적 통일정부, 셋째, 그리고 어느 1개 강대국 지배가 아니고 4개 강대국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4개국 공동지배하에 있을 가능성을 가진 통일방안으로 개발될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 좌우 정치세력들이 반탁운동과 찬탁운동을 반공·반소운동과 반미·친미운동으로 발전시켜 마·소간의 협상분위기를 깨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소련 각각에서 타협의 결과에 대한 불안과 회의를 갖게 한 것은 한국정치인들의 일대 실책으로 보인다.⁴⁴⁾

물론 반탁운동이 민족자결과 자주성을 내세워서 반탁의 입장에

43) 최상용,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서울: 나남, 1988), pp.19-70.

44) 이호재, 앞의 글, pp.26-27.

섰던 것은 ‘자주적 통일국가’ 건설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자세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해방이 연합국 특히 미·소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미·소 등 연합국의 결정에 반대해서라도 자주적 국가를 건설하여 했던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점에서 환상적이었고,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 원초적 민족감정을 이용한 반탁운동의 전개가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 수립을 불가능하게 했던 점에서 볼 때 대외적 압력에 대한 ‘단견적 대응’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극우세력들이 반소·반공으로 반탁운동을 확산시켰던 것은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외세를 이용해서라도 통일운동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했는데도 처음부터 적대세력으로 몰고 가 결국 분단을 고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⁴⁵⁾

정치세력의 수준에서 분단 원인과 관련하여 지적해야 할 사항은 분단과 이해를 함께 하던 세력들의 행태이다. 특히 일제기를 통하여 친일·부일의 진영에서 활동했던 세력은 한반도에 냉전을 강화시켜서 분단으로 나아가게 했던 주역의 하나로 지목받아야 할 것이다.⁴⁶⁾ 친일파들은 반탁투쟁에 의해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행위가 면제되고 오히려 ‘애국자’로 행세할 수도 있게 되었다. 여기서 한국형 반공이데올로기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거니와 이것이 효용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정보의 공정한 전달이 어려웠고 따라서 사리판단을 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에서 반탁운동이 당시의 민족감정에 호소력이 컸기 때문이다.

국제적 조건이 먼저 주어진 상황에서 한국민족은 미·소간의 대

45) 서창호, 앞의 글, pp.435-436.

46) 강만길, 『한국민족운동사론』(서울: 한길사, 1985), p.92.

립양상을 내부적으로 단합해 극복하기 보다는 오히려 분열했다. 탁치논쟁은 국내정치세력의 좌우대립에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이슈였다. 찬반탁 논쟁은 국제형의 분단에 내쟁적 요소를 가미했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에 민족내적인 찬반탁 논쟁이 가세함으로써 결국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구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좌우익간의 첨예한 찬반탁 대립은 이후까지 지속됨으로써 분단의 내적 구조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좌우대립에 탁치 문제가 매개되면서 좌우대립은 상호상승작용을 일으켰으며 끝내 ‘골육상쟁’의 지경에 이르렀다.

한반도의 분단은, 외세에 의해 규정되어진 것이면서 동시에 민족내부의 분열과 정치력 빈곤에서 기인된 것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정치세력들이 양보와 타협없이 대결했던 결과물이고, 분열지향적 이데올로기와 가치관들이 민족통일에 기여되는 방향으로 수정·지양됨이 없이 관철되었던 산물이며, 사회모순들이 평화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방치돼온 태서 기인된 산물이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4개국 신탁통치안의 내용에는 한반도 중립화적 구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 양대세력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점령한 현실에서 문제해결의 길이 연립정부와 중립화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정국에서 ‘중립’ 혹은 ‘중립화통일’ 같은 개념 자체는 별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해방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었던 최대공약수는 일단 ‘중립통일’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도 있었다. 유럽에서 오스트리아가 성공적으로 중립국가를 형성하였던 것과 같이 한국도 동북아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하나의 완충국가로 비동맹 중립국가를 건설하여 등거리 외교정책 등을 제대로 추진하였다면, 내부적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분단을 면할 가능성이 있었다.

해방 후 활동한 좌우양익 지도자들의 행태는 통일을 위한 구심력을 형성하는 쪽으로 보다는 분단과 냉전대결을 조장하는 원심력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⁴⁷⁾ 특히 국제적 냉전을 완화시켜야만 민족자주의 공간이 넓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냉전을 부추기고 그것을 국내로 끌어들이려 노력하였다. 해방 후 좌우대결의 중간에서 양쪽을 화해시켜서 민족적 통일을 이루어내려던 중도파들의 시도는 양극 세력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2.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의 실패

미국은 아직 신탁통치에 의한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련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으로 자기의 지지기반을 굳히려고 하였다. 여기서 나온 것이 좌우합작 추진이었다. 이는 미국이 소련과의 협상을 위해 잠시 그 지지기반을 극우세력을 온건세력으로 바꾸려는 동시에 좌익세력을 분열시켜 보려는 측면도 있었다.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쓰기에 앞서, 소련의 일방적인 지배를 막으면서 미국에 우호적일 수 있는 통일정부수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좌우합작운동은 1946년 3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속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협의대상 문제를 중심으로 결렬된 직후인 5월 25일에 분열된 국내정국을 통일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1946년 10월 4일 좌우익간의 조정을 거쳐 통일원칙인 ‘좌우합작 7원칙’을 합의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좌우 양익의 실세들이 이탈해

47)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1), p.597.

버려 좌우가 각각 배척하는 중간파만의 합작으로 귀결되었다.

좌우합작 7원칙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구조 하에서 힘겨운 민족통일의지가 어느 정도 담겨있는 문헌이라고 주장하는 인사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긍정적 평가보다는 중간파만의 결집으로 끝난 한계가 있는 정치운동이었다는 평가가 공정할 것이다. 이후 중간파는 마소 대립과 좌우대립이 격심해진 상황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다.⁴⁸⁾ 따라서 좌우합작운동이 목표로 했던 좌·우익간 합작과 통합은 달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좌우양익을 배척하는 새로운 중간파를 결집시켰으므로 합작의 본뜻은 무색해졌다.

좌우합작은 합작통일이 아닌 분열을 가져왔다는 치명적인 한계 외에 과정상에도 원초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미국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사실이 그것이다. 좌우합작은 좌익세력이 극좌화하고 우익세력은 극우화하여 각각 자신들의 노선에 집착하고 마소의 냉전에 편승하여 양극화로 몰아간 것이 실패의 요인이다. 또한 합작운동의 정치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했던 것도 실패 이유의 하나이다.

한편 극좌극우세력의 편협성에 반기를 들고 민족적 공동운명의 식에 입각한 좌우합작과 통일전선을 주장하고 나선 중도세력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극좌극우의 리더십이 도덕성을 결여한 채 정치력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중도파의 리더십은 도덕성만 갖고 있을 뿐 험한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정치력은 결여하고 있었다 할 수 있다. 도덕성과 정치력을 아울러 갖고 있는 지도자가 없었고, 대신에 독점과 배제에 익숙하고 타협과 양보에 인색했던 세력

48) 이완범, “한반도 분단의 성격: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 분단,” 한국전쟁학회 편, 『한국현대사의 재조명』(서울: 명인문화사, 2007). pp.51-53.

들이 많았다는 것은 민족적 분열과 분단의 결정적 원인으로 보인다.⁴⁹⁾

미소공위의 결렬은 당초에 미소공위를 통한 임시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했던 좌우합작운동의 존재의미를 없애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이 운동의 두 지주 가운데 하나였던 여운형이 1947년 7월 19일 극우분자들에 의해서 암살됨으로써 이 운동은 활력을 잃어버렸으며, 마침내 12월 6일, 합작위원회 전체회의의 해체 결의로 그 막을 내렸다.

미소가 대립하여 남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 민족이 단합하여 난국을 대처하여도 어렵기 짝이 없는데, 특히 박헌영을 비롯한 극좌세력과 이승만 및 한민당과 같은 극우세력들이 자신들만의 노선에 집착하고, 더욱 기득권을 유지하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오히려 미소의 냉전 세력에 편승하여 양극화로 몰아간 것이 통일민족국가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좌우합작운동이 실패하고 말았지만 좌우합작운동은 일제 식민시대 독립운동전선에서 나타났던 민족통일전선운동의 맥을 잇고 있는 것이며 또한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자주적 통일국가를 수립하려는 운동으로서 극좌와 극우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어느 하나의 강대국에 편향되지 않은 균형적 대외정책을 표방했던 것은 아직도 분단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뭔가를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⁵⁰⁾

49) 흔히 전후 오스트리아의 정치세력들이 보여준 지도력은 통일지향 리더십의 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정치세력과 지도자들은 단합된 행동과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노선에 의해 외세의 영향력을 중화시키고 민족사회를 통합하여 분단으로부터 통일국가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정영훈, 앞의 글, p.144.

50) 이성구, “한반도 분단의 대내적 원인에 관한 연구,” 『동서문화연구』,

남북협상은 1948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미국과 유엔의 주도에 의한 ‘가능지역 총선’(이른바 5.10 단독선거)가 현실화되었던 시점에 남북지도간 협상을 추진하면서 단독선거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통일운동을 지칭한다. 정파에 따라 이 운동에 대한 평가는 사뭇 다르다. 5.10 선거에 참여해 정부를 수립했던 이승만·한민당 입장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남북협상이초대받은 잔치에 참석해 들러리만 선 것으로 평가하면서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과 소련에게 놀아난 것으로 평가 절하하였다. 반면 이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비록 이 운동이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후 통일운동의 한 지침을 제공했으며 한국민의 통일의지를 발산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V. 복합적 요인

1. 종합적 시각

한반도 분단은 1945년 8월 미국에 의해 북위 38°선이 일방적으로 획정되고 소련이 이에 동의하면서 국토분단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한반도는 당초 국제형의 성격을 가진 채 분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외인이 먼저 주어진 상태에서 한국민족주의는 이의 규정력을 내부적으로 단합해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 양상을 보였다. 탁치논쟁 등에서 표출된 좌우익간의 첨예한 대립은 국제형의 분단에 내쟁적 요소를 가미하게 된 것이다. 3년간의 분할점령을

제9집(홍익대 인문과학연구소, 2001), p.213.

거친 1948년 8-9월에 남북은 각각 미·소의 후원 아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로 분립되어 ‘체제분단’을 결과했다.

체제분단 즉 남북한 단독정부(분단국가) 수립은 주로 미·소라는 외세가 한국문제에 개입했기 때문이지만, 부수적으로는 한국인이 이러한 상황에 맞서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한국의 정치세력들은 외세에 거의 규정당해 좌우익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였던 것이다. 그 결과 분단국가가 건설되었다. 분할점령으로 외인이 먼저 상황을 주도하는 형국에서 내인이 수동적으로 결합해 국제적 성격이 강한 복합형의 구도는 형성되었던 것이다. 해방 후 3년사는 민족 내부 역량의 한계가 노정되는 굴절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민족의 광복을 싸워서 얻어내지 못했던 상황적 조건 즉 해방에 대한 연합국의 규정성 때문에 이 시기 역사가 굴절되었던 것이다.⁵¹⁾

내인이 없었다면 외인 자체만으로는 한반도 분단을 강제하지는 못했을 것이며 내인이 단합했다면 외인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한국민족주의가 통일되지 않았던 것이 민족분단의 원인 중의 하나이었음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다. 외인이 없었다면 내전을 거쳤을 가능성은 있어도 분단은 애초 없었거나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⁵²⁾ 외인은 근본적이며 결정적·주도적이며 압도적 원인이며 내인은 원초적·부수적이었지만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분단 후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을 겪으면서

51) 이완범, “미국의 한국 점령안 초기 준비: 분할점령의 기원, 1944년 -1945년 7월 10일,” 앞의 책, pp.144-146.

52)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과 대만의 경우와 같은 지리적인 격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53년 ‘민족분단’의 구조는 완성되었다. 한국전쟁으로 내쟁적 성격은 강화되어 내외의 힘이 균형을 이룬 ‘명실상부한 복합형’이 되었던 것이다.

통일을 이룩한 나라들의 경우 한결같이 민족내부의 힘이 외적인 힘을 제압하여 그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다. 독일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약화로 인해 그나마 외세에 의해 지탱되던 내인(국제형 분단이므로 원래부터 미미함)이 더욱 무력화되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이 몰락으로 흡수통일을 이룩한 사례이다. 원래 강대국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국제형으로 출발한 독일은 서방국가들과 소련이 점령지역들에 내인을 창출하려 했으나 내인이 게르만 민족 내부에 완전히 침투하지는 못했다. 냉전 몰락조짐이 가시화되던 1980년 말 외인은 내인을 무력화한 후 완전히 없어진 내인(민족 단결)은 소련과 미국의 승인을 받아 통일을 달성했다. 즉 민족단결이 외인을 압박했던 것이다.⁵³⁾

오스트리아는 소련,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 4개국에 의해 1945년 분할 점령되었으며 1937년 이전 상태의 영토로 복귀되었다. 1955년 5월 15일 중립체제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을 4국이 승인하여 1955년 9월 27일 자유독립국가 합의 완전한 주권이 오스트리아에 재건되었다.⁵⁴⁾ 점령 10년 동안 국민 내부의 단결을 도모한 후 점령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기에 통일이 가능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처음부터 내인이 없었던 경우이며 내적 단결이 통일을 추동했던 케이스이다.

53) 이완범, “한반도 분단의 성격: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 분단,” 한국전쟁학회 편, 앞의 책, pp.31-33.

54) 전득주, “강대국에 합의에 의한 분할점령: 오스트리아,” 『세계의 분단 사례 비교연구』(서울: 푸른길, 2004), pp.415-416.

베트남의 경우는 프랑스와 미국 등 외세가 남베트남에 정권을 수립하여 후원했지만 민족을 완전히 갈라놓지는 못했다. 따라서 베트남과 예멘은 내전을 경험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은 후 통일을 이룩하였고 이제 한반도만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형국이다.⁵⁵⁾

위 국가들의 예를 통해서 보건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족내부를 단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통일의 주체는 민족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분할 그 자체는 외세가 가져다 준 것이지만 분단고착화는 우리가 외세에 편승하여 자초한 것이라는 대해 자기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유기적·상대적 시각과 함께 분단 문제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시각은 가변적·동태적 시각이다. 즉 외인과 내인은 특정 국면에서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영향을 미쳐 상승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변적인 시각은 결정적 요인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유동적인 인식이다.

2. 분단체제의 고착화

분단의 일차적인 ‘확정’은 남북한 양쪽에서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런 점에서 단정 운동을 맹렬히 벌인 이승만과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하면서 공산 정부 수립으로 매진한 김일성, 또 그 뒤에서 이를 조종하거나 영향을 준 미·소 양국의 책임 모두

55) 물론 중국과 대만이 남아있지만 이 양안관계는 또 다른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 중요하다. 그러나 분단을 결정적으로 ‘고착’시킨 것은 오히려 6.25전쟁이었다. 전쟁은 통일은 고사하고, 그 결과는 반대로 남북 한간의 적대감을 고조 시키고 대화 교류를 단절시킨 분단의 고착이었다. 따라서 한국전쟁의 책임은 분단 고착의 책임이기도 하다.⁵⁶⁾

외인인 38°선 획정(미소의 분할점령, 국토분단)이 강요되었으므로 한국의 분단은 국제형 분단으로 시작했다. 1946년 초 탁치 논쟁으로 내쟁적 성격이 가미되었다. 1948년 남북 각각 외세가 후원한 정부가 수립(체제분단)되어 외인과 내인이 결합되었으나 아직 국제적 성격이 강했다.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이었다. 1950년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을 겪으면서 1953년 ‘민족분단’의 구조는 완성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의 분단질서의 출발 지점이었던 1945년 분단의 시작과 1953년 정전(협정)체제=53년 체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현금의 분단질서의 출발인 정전체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적 수준의 미·소타협을 의미했다. 요컨대 한국에서의 휴전 합의에 따른 정전체제의 등장은 동아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타협=알타협의=국제분단의 복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전쟁을 통해 쌍방이 공히 타파하려고 했던 알타체제=타협체제로 회귀한 것이 정전체제였던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한국 문제의 시원이 되는 1945년의 남북분단은 단순히 구조적 차원에서 국제 미·소냉전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미·소합의에 따른 분단이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분단의 시작은 철저히 국제

56) 김영명, “현대사 연구의 역작들,” 『한국정치학회보』, 36집 1호(한국정치학회, 2002), p.332.

분단이었으며, 남한과 북한은 각각 국제 분할 점령의 산물로서, 연장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1953년 체제의 시작은 이러한 국제 분단이 전쟁을 통해 강화되고 내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⁵⁷⁾

1950년 북한·소련·중국의 한반도 독점 지배의 의도는 미국이 유엔을 통하여 주도한 서방동맹에 의하여 봉쇄되었다. 미국과 유엔군이 다시 한반도의 서방주도 통일을 시도하였고, 이번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는 중국이 개입하여 이를 저지하였다. 결국 1953년 휴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는 재분단되었고 1945년의 형태와 같은 세력균형이 이루어졌다.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하려던 양쪽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나고 분단을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양국간의 상호비방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한반도에는 단지 정전협정, 즉 군사적 행동의 일시적 중지만이 남아 있었다. 언제든지 전쟁은 다시 재개될 수 있었고 이런 상황은 열전과 냉전의 중간 상태인 미온적 전쟁이라고 불릴 수 있었다.

결국 한반도 분단은 그 유형상 국제형(1945)→국제적 성격이 강한 복합형(1948)→명실상부한 복합형(1953)→내쟁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1972 이후)으로 변화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최초에는 민족외적인 외세의 힘(외인)에 의하여 분할점령이 강요되었으나, 민족내부의근본적인 원인(내인)과 결합되어 복합적인 분단 구조를 형성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내인은 외인에 압도당해 분단체제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외인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해갔고 지금은 그 내재적 힘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

57) 박명림, 앞의 글, p.241.

에서 광복 70년사를 ‘외적 규정력에 맞서 내적 자발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단의 책임소재를 규명함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한반도 분단의 구체적 4주체인 미·소·북·남 각각의 책임을 그들의 몫만큼 지울 수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3년 뒤 휴전이 체결된 이후 한민족은 60년 동안 대립과 경쟁을 하면서 이념적인 분열만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분열, 갈등, 대립을 겪게 되었다. 분단 당시 시작된 세계적 차원의 냉전은 이미 1989년 종식되었고, 북한체제를 건설한 공산주의 종주국 이었던 소련도 이미 10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지만 북한 공산체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존재하고 있다. 민족분열과 국제개입에 따른 외세의 역할을 따져 볼 때 어느 하나라도 없었다면, 예를 들어 외세가 분단을 시키려 하여도 민족이 단결하여 이를 막아내려는 노력을 하였더라면, 아니면 외세가 한반도의 통일과 독립을 처음부터 모색하였다면 민족적 분열을 이기고 통합된 체제를 시작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점차 볼 수 있다.⁵⁸⁾

VI. 나오면서

결국 미국과 한민당이승만 세력의 주도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북한에서는 소련과 김일성 주도로

58) 김계동, 앞의 글, p.360.

9월 9일 북한정부가 수립됨으로써 1945년의 국토분단은 1948년 체제분단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3년간 열전과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38°선을 휴전선으로 바꿔 놓은 민족분단으로 완결되었다. 다시 말해서 20세기 중반 외세에 의해 강요되어 국내 정치세력들의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 지지된 분단이 70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할 것이다.

한국의 분단은 구조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세계대립, 냉전대결을 포함하여 역사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개항 이래 식민지 시대부터 내재하며 대립해온 민족독립과 근대국가건설의 노선이 국제냉전과 만나면서 최종적으로 봉인된 것을 의미한다. 1945년 이후 분단문제는 지금까지 한국의 내부와 외양, 국가전략, 상호 관계를 결정지은 핵심요소의 하나였다.

1945년의 분할점령으로부터의 1953년 휴전협정까지의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파악해 보면 가장 중심부에는 강대국들의 세력균형 정책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탁통치 실시를 통하여 반공정권을 한반도에 수립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냉전대립으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미국은 남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친서방 정부를 성립시켰다. 역사적·지리적으로 중국과 소련의 영향권에 놓여 있던 한반도에 미국의 세력을 정착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한반도 분단체제의 형성은 이해관계의 대립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를 지닌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면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이 협력해서 통일국가를 수립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된 것으로 종전과 함께 전후질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미 양국의 협력관계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한반도 문제 처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미·소 양국의 이해 대립으로 인한 한반도의 분단은 당시의 상황에서 피하기 힘든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분단 책임의 문제는 복잡적이다. 그러나 최초의 영토적 분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 분할자는 일차적으로 미국이었고 부차적으로 소련이었다. 민족 내부의 분열과 역량 부족은 우리의 비극이었지만, 강대국의 영토 분할에 맞설 힘과 능력이 없었다고 약소 민족 지도자를 지나치게 비난할 수만은 없기도 하다.

미·소는 각각 남북에서 우익과 좌익을 견인해서 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소기의 점령 목적을 달성했다. 국내정치세력은 외세에 의해 주어진 분할점령 구도 하에서 미·소 각각의 우호적 정부 수립 기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이에 영합해 분단구조 창출에 기여했음으로 외인은 내인을 견인했으며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 분단은 한반도에서 구축되었다. 국내 정치세력들이 국제정세에 단견적으로 대응하였고, 자신들의 정치노선에 집착하고 기득권과 주도권 때문에 분열·대립·투쟁으로 나아가, 단합된 힘으로 외세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분단 고정화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분단은 대외적 원인만이 의해서가 아니라 대내적 원인이 그에 가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한반도 분단은 국제적인 요인이 더 큰 작용을 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물론 한민족이 단결하여 분단을 막으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큰 아쉬움을 가지게 되지만, 40년 가까이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치적 능력, 특히 자치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에서 외세에 대항하여 민족적 비극을 극복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궁극적 목적을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고 복원하는 데에 두지 않고,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미래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분단을 결과한 민족내적 원인에 대해서도 반성적 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단에 이르게 한 민족내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 그것은 우선 역사를 실체적,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작업이 될 것이며, 동시에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대과제에 대해서도 기여하는 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통일과 통합을 위한 조건과 방안을 찾는 과업은 분단의 과정과 원인에 대한 분석 작업으로부터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분단된지 이미 70년이 다 되었지만 통일을 향한 전망과 모색이 희미한 이 시점에 그러한 반성작업은 절실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논문투고일 : 2014.01.10

심사완료일 : 2014.01.25

게재확정일 : 2014.01.29

□ 참 고 문 헌

강만길, “해방전후사인식의 방향,” 『해방전후사의 인식 2』, 서울: 한길사, 1985.

강만길, 『한국민족운동사론』, 서울: 한길사, 1985.

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연구 2: 해방과 분단』, 서울: 역사비평사, 1995.

김강녕, “625전쟁과 남북한관계,” 『통일전략』 제10권 제1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0.

- 김계동, “한반도 분단·전쟁에 대한 주변국의 정책: 세력균형이론을 분석틀로,” 『한국정치학회보』, 35집 1호, 한국정치학회, 2001.
-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0.
- 김광식, “미군정과 분단국가의 형성,” 최장집 편, 『한국현대사 I』, 서울: 열음사, 1985.
- 김기조, 『38선 분할의 역사: 미·소·일간의 전략대결과 전시 외교 비사(1941-1945)』, 서울: 동산출판사, 1994.
- 김영명, “현대사 연구의 역작들: 신복룡 저, 『한국 분단사 연구』, 서울: 한울, 2001.
- 김학준, “한반도 통일문제의 재조명: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요인,” 『국제정치논총』, 제27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87.
- 김학준, “해방과 분단,”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13집,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5.
-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과정·후전·영향』, 서울: 박영사, 1989.
- 박광득, “625전쟁의 기원과 원인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10권 제1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0.
- 박명립, “한국분단의 특수성과 두 한국: 지역냉전, 적대적 의존, 그리고 토크빌 효과,” 『역사문제연구』 제13호, 역사문제연구소, 2004.
- 박태균, 『한국전쟁』, 서울: 책과함께, 2005.
-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1.
- 서창호, “남북 분단의 대내적 원인: 찬·반탁 투쟁과 좌우합작운동의 실패를 중심으로,” 『민족공동체와 국가발전』, 한국정치학회, 1989.
- 신복룡, 『한국 분단사 연구』, 서울: 한울, 2001.
- 신용하, “열강의 한국 남북분단 및 신탁통치 정책과 백범 김구의 노선(1943~45),”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광복직후의 건국운동과 백범 김구』 (백범기념관 개관 2주년기념 학술회의 논문집), 2004.

- 심지연, 『미소공동위원회 연구』, 서울: 청계계연구소, 1989.
- 안병도, “한국현대사의 연구동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1845-1980년대의 정치·외교분석』, 서울: 대왕사, 1993.
- 양동안, “한반도 분단의 정확한 원인 규명,”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와다 하루키, “남북분단의 기원과 상호공존을 위한 길,” 『지구촌시대의 한국: 회고 50년, 전망 50년』,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98.
- 이미경, “전후 소련의 한반도 정책과 분단체제 형성,”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3권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1.
- 이성구, “한반도 분단의 대내적 원인에 관한 연구,” 『동서문화연구』, 제9집, 홍익대 인문과학연구소, 2001.
- 이완범, “미국의 한국 점령안 조기 준비: 분할점령의 기원, 1944년-1945년 7월 10일,” 『국제정치논총』, 제36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6.
- 이완범, “서장: 38선 획정에 대한 진실 탐구의 의미,” 『삼팔선 획정의 진실: 1944-1945』, 서울: 지식산업사, 2001.
- 이완범, “한반도 분단의 성격: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 분단,” 한국전쟁학회 편,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서울: 명인문화사, 2007.
- 이완범, “한반도 분단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미국과 국내정치 세력간의 역학관계, 1945-1948,” 유영익 편,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 이완범, 『한반도 분할의 역사: 임진왜란에서 6.25전쟁까지』,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 이호재, “한국분단연구의 특징과 문제점: 분단원인의 제가설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27집 1집, 한국국제정치학회, 1987.
- 전득주, “강대국에 합의에 의한 분할점령-오스트리아,” 『세계의 분단사례 비교연구』, 서울: 푸른길, 2004.

- 정경환, “625전쟁의 기본성격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10권 제1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0.
- 정경환, “한반도 분단의 원인과 성격,”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부산: 신지서원, 2002..
- 정영훈, “한반도 분단의 민족내적 원인,” 『정신문화연구』, 21권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 정천구, “한국의 안보딜레마와 한미동맹의 가치,” 『통일전략』 제12권 제3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
- 정해구, 『10월인민항쟁연구』, 서울: 열음사, 1988.
- 주봉호, “한반도 분단의 성격: 대내외적 요인,” 『통일전략』, 제10권 제3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0.
- 진덕규, “해방직후 좌우세력의 성격,”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론』, 서울: 법문사, 1986),
- 최상용, “분단, 점령 그리고 평화,” 『남북분단의 극복과 평화』, 서울: 고려대 평화연구소, 1990.
- 최상용,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 서울: 나남, 1988,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eperate Regim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Gaddis, John Lewis, “The Emerging Post-Revisionist Synthesis o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Diplomatic History*, Vol.7, No.3, Summer 1983.

Henderson, Gregory, Richard N. Lebow and John G. Stoessinger, *Divided Nations in a Divided World*, New York: David McKay Company, Inc., 1974.

Maddox, Robert James, *The New Left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Press, 1973.
- Schurmann, Franz, *The Logic of World Power: An Inquiry into the Origins, Currents and Contradictions of World Politics*, New York: Panthaon Books, 1974,
- Stueck Jr., William W. *The Road to Confrontation: American Foreign Policy Toward China and Korea, 1947-195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1.
- Williams, William Appleman, "Confession of an Intransigent Revisionist," *Social Revolution*, Vol. XVII, 1973.
- FRU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3-1945.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external Causes of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Joo, Bong Ho(Donggeui University)

Over the past three decades, the division of Korea has been persistent while we have observed fundamental global changes such as the collapse of the Communism, the end of Cold War, the integr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9-11. Combined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the division of Korea is particularistic and regional specific. In practice, the costs caused by the division of Korea are substantial, persistent due to the particularistic aspects inherent in Korean Question. The issue of the division of Korea is the most critical question to researchers of Korean Studies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It pertains to almost every constraint and enabler with respect to the reality of Korean people and the future path of Korea such as the nation formation, nationalism, modernity, peace and unification, and democracy. The issue of the division of Korea constructs the core element of the Korean Question since 1945, which is the consequence and the most critical aspect of the Korea Question from various levels of analyses. The issue of the division of Korea, thus, has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to every area of practices and the studies of Humanities.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situation around the second world war is an important topic in the research of the history of the division of Korea. The division of Korea was largely determined by foreign forces and the alliances among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forces were not materialized, determining the prototypical structure of the division of Korea. There are several substantive issues in the research of the history of the division of Korea. The most pertinent issue, however, would be the establishment of the 38th Parallel, which led the division of the Korean territory and of political systems, and the Korean War. The 38th Parallel line turned to be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fter the Korean War, conditioning the fundamentals of Koreans in tragic manners. The division of Korea is the fundamental constraint to the possibilities of Korean, thus the understanding the causes of the division of Korea is essential as the most important problem to Korean is reunification. Aiming for contributing to the understanding the causes of the division of Korea, this paper shows the multiplicity and flexibility of the issues causing the division of Korea.

Key Words : division of Korea, 38th parallel, trusteeship, divide and rule, balance of power, Korea War, post-revisionism, internal factors, external factors